

2022년도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(기획재정부 등 소관)

2023. 10.

대한민국정부

- 목 차 -

(통계청 : 13건)

1. 감사원 감사에 대해 통계청장의 중립성·독립성 태도 견지 필요	1
2.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여 준수할 필요	1
3.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	3
4.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를 별도 산출할 필요	3
5. 자가주거비 포함 등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통계를 개선할 필요	4
6.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복합적 시스템 마련 및 저출산 관련 세부지표 개발 필요	5
7. 농업 관련 통계 개선 필요	5
8. 가족다양성 및 성소수자 관련 통계 등 개선 필요	6
9. 지역 관련 통계의 개발·관리 및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	7
10.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통계의 개발 필요	7
11. 통계청 사업의 운영상 개선	9
12. 지방청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및 통계조사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 필요	10
13. 현장조사 공무원 관련	11

통 계 청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. 감사원 감사에 대해 통계청장의 중립성·독립성 태도 견지 필요 · 기계동향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작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통계청의 전문성·신뢰성·유용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통계청장의 중립성·독립성 태도 견지 등의 역할이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통계법상 중립의무(제2조), 사전제공 금지(제27조의2) 등 법적 의무를 이행 중 ○ 통계공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통계법 개정안 마련 및 시행('16년) ☐ 현재 감사가 진행중인 부분은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음
2.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여 준수할 필요 · 쌀 생산량조사 현실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과 원칙 준수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표본설계, 추정방식 등 과학적 통계기법을 활용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정확하게 통계를 생산하고 있음 * '22년 통계청 쌀 예상량이 타 기관 예상량과 큰 차이가 없음(통계청 380만톤, 농진청 386만톤) ☐ 현장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소통을 확대하여 쌀 생산량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
· 소비자물가지수 등 여러 지표가 국민의 실생활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현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위하여 통계와 관련된 사항은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정하여 추진할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있으며, 체감물가와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 중 ○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 단위 소비자물가 품목 개편 중간 연도에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실시 ○ 공식지수 뿐 아니라 생활물가지수, 신선식품지수, 자가주거비포함지수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제공 중 ☐ 올해는 가구특성별 소비 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특성별 물가지수*를 개발하여 공표함('23.6월) *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 ○ 향후 매년 상반기 중 공표 예정

시정 · 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☐ 또한, 국민 체감 제고를 위해 외식배달비 지수 개발 및 자가주거비지수 개선* 추진 중 * 자가주거비 주지표 전환 및 작성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<향후 추진계획> ☐ '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('23.12월) ☐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변동률을 파악 하기 위해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· 공표('23.12월) ☐ 자가주거비 작성방법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기능성 검토('23~'26) ○ 자가주거비 작성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관련 의견 수렴('23.12월) ○ 시계열 축적 및 모니터링,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('24) ○ 전문가·관계기관 2차 의견수렴('25) ○ '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 반영 여부 결정('26)
· 빈집 통계의 경우 국토부와 빈집의 정의가 달라 국민의 혼란을 유발 하고 있음	<시정 · 처리결과> 조치 중 ☐ 주택총조사와 빈집실태조사(미승인통계)의 빈집은 조사목적 및 기준, 대상이 달라 차이가 발생하므로, 통계청은 자료공표 시 양 자료 간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수록 중(매년) ○ 현재 빈집실태조사 담당부처(국토부·농식품부· 해수부)에서 도시와 농어촌 빈집조사 간 작성체계 일원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 중* *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('23.6.8.) <향후 추진계획> ☐ 빈집 통계 관련 이용자 혼란 최소화 방안 검토(~'23.12월)

시정 · 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 ·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																				
	☐ 국토부 등 관련 부처 업무 협의 및 개선 추진('24.상) ○ 빈집실태조사 관련 부처의 개선작업 완료 후 빈집통계 개선*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실시 * 두 통계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되 용어 등 관련 사항 개선 검토																				
3.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· 통계법에 의해 생산하는 66종의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통계청이 국가통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	<시정 · 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국가통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해 통계 조정제도, 통계 기준 설정, 통계예산 사전 검토 등 업무를 수행 중 ☐ 또한, 통계데이터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등록부, 통계데이터센터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계법을 개정함* * '23.7.18. 일부개정, '24.1.19.시행예정																				
4.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련 통계를 별도 산출할 필요 · 정확한 고용통계를 위해 재정 투입으로 창출된 일자리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	<시정 · 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세금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 직접 일자리 참여자 현황 통계작성 방안을 '22년에 논의하였고, '23.2월부터 통계 제공 23년 1분기 직접일자리 참여 현황 [23년 1분기 직접일자리 참여자 현황 (단위: 천명)]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'23.1월</th><th>'23.2월</th><th>'23.3월</th></tr><tr><td>직접일자리</td><td>664</td><td>823</td><td>880</td></tr><tr><td>전년 동기 대비</td><td>+5</td><td>+49</td><td>+36</td></tr><tr><td>노인일자리</td><td>572</td><td>714</td><td>759</td></tr><tr><td>전년 동기 대비</td><td>+9</td><td>+49</td><td>+56</td></tr></table> * ('25.27.) 행정자료 활용 등 직접일자리 규모 파악 방안 논의 (통계청, 기재부, 고용부, 복지부 참여) * ('22.6.28.) 「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발표 및 개선 방안」 보도(고용노동부)	구분	'23.1월	'23.2월	'23.3월	직접일자리	664	823	880	전년 동기 대비	+5	+49	+36	노인일자리	572	714	759	전년 동기 대비	+9	+49	+56
구분	'23.1월	'23.2월	'23.3월																		
직접일자리	664	823	880																		
전년 동기 대비	+5	+49	+36																		
노인일자리	572	714	759																		
전년 동기 대비	+9	+49	+56																		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5. 자가주거비 포함 등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통계를 개선할 필요 · 소비자물가지수 자가주거비 포함, 가중치 개편 주기 매년으로 검토, 배달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으로 반영 등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현재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작성 중이며, ○ 자가주거비의 주지표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주요국 사례검토,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환 여부 결정 예정('25년 기준 개편 시) ☐ 2013년부터 5년 단위 소비자물가 품목 개편 중간 연도에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실시 (2~3년 주기) ☐ 가중값을 1년 주기로 갱신하여 작성한 연쇄방식 소비자물가지수를 2006년부터 보조지표로 작성 제공 중 ☐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의 변동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식배달비지수를 개발 중 <향후 추진계획> ☐ '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('23.12월) ☐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 변동률을 파악하기 위해 외식배달비지수 개발·공표('23.12월) ☐ 자가주거비 작성방법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가능성 검토('23~'26) ○ 자가주거비 작성 개선방안 마련 및 주지표 전환 관련 의견 수렴('23.12월) ○ 시계열 축적 및 모니터링,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('24) ○ 전문가·관계기관 2차 의견수렴('25) ○ '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시 반영 여부 결정('26)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6.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복합적 시스템 마련 및 저출산 관련 세부 지표 개발 필요 ·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복합적, 다층적 저출산 분석 세부 지표 개발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을 위한 TF 운영 (’22.11~’23.1월) ○ 저출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저출산 지표체계 구성안 마련 ☐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구축 연구용역 실시 (’23.4~9월) ○ 주요 3대 영역(저출산 결정요인, 저출산 현황, 가족정책)별 지표 구성(안)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<향후 추진계획> ☐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(’23.12월) ☐ 저출산 통계지표 시산 및 정합성 검토(’24년) ☐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공개(’24.12월)
7. 농업 관련 통계 개선 필요 · 통계 고도화정확성 향상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한 통계방식을 마련 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농어업통계 정확성 제고 개선추진 ○ 산지 쌀값조사 개선 완료(’23.1월) – 쌀값의 과대 추정 방지를 위한 유통량을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개선 ○ 농업통계조사시스템 개발(’23년~’24년) – 공간정보기반의 농업생산조사시스템 개발을 통한 현장 조사 정확성 개선추진 중 ○ 1인 농가 이상 소득공표 개선(’23년~) – 1인 농가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표본 300개 확대, 1인 농가소득 조사 중 ☐ 농촌진흥청, 농촌경제연구원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 확대 * 농촌경제연구원 작물 관측 자문회의 등 <향후 추진계획> ☐ 농업생산조사시스템 개발 완료(’24년) ☐ 1인 이상 농가소득 추가 공표(’25년)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8. 가족다양성 및 성소수자 관련 통계 등 개선 필요 · 사회조사 등 통계청의 국가승인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성소수자 조사항목 신설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사회통합실태조사 (한국행정연구원)에서 성적 소수자 관련 항목을 매년 공표 중임 ☐ 사회통합실태조사 및 사회조사 짝수년도 ‘가족’ 부문 조사 시 의견수렴 및 조사 가능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<향후 추진계획> ☐ 사회조사 항목 개선 관련 이용자·관계기관 의견 수렴('23.12월), 수요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, 조치('24.2월)
· 개정된 국제질병분류(ICD-11)와 동일하게 ‘정신 및 행동장애’에서 ‘성 건강과 관련된 병태’로 대분류 변경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‘성 전환증’은 ICD-11에서 신설된 대분류의 질병 중 하나로, ○ 가능한 조속히 ‘성 전환증’을 현재의 ‘정신 및 행동 장애’ 범주에서 ‘성 건강과 관련된 병태’로 이동시키는 ICD-11 기반의 KCD 10차 개정 초안('24.12. 예정)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☐ 참고로, ICD-11의 자국어판 개발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영어권 국가(미국, 캐나다, 호주)와 네덜란드,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아직 ICD-11의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있음 <향후 추진계획> ☐ ‘성 전환증’의 대분류 변경을 반영한 KCD 10차 개정 초안 마련('24.12.)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9. 지역 관련 통계의 개발·관리 및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 지역경제 정책 수립시 지역내 총생산(GRDP)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지역내 총생산(GRDP) 통계 시의성 문제 개선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통계 이용자의 수요 충족 및 지역소득(GRDP)의 시의성 개선을 위해 통계청은 분기 GRDP 개발을 추진 중 - 지역소득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지역소득 속보(연간 조기 공표) 개발과제를 분기 GRDP(분기별 공표) 개발로 전환 * <추진실적> · 지역소득 속보 개발계획 수립('21년) · 지역소득 속보 시산('22년) · 분기 GRDP 개발로 전환('23년 5월) <향후 추진계획> ☐ 산업별 추계방안 마련 및 '23년 분기 GRDP 시산('23년) ☐ 추계방법 개선 및 '24년 분기 GRDP 시산('24년) ☐ 국통위 상정 및 분기 GRDP 공표 추진('25년)
지방소멸지표의 공통기준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지역인구위기지표(지방소멸지표) 공통기준 작성 연구 진행 중(5~12월) - 지방소멸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인구 감소 지역 선정 결과 분석 - 선행연구를 통해 지표표를 구성하고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기준 마련 추진 <향후 추진계획> ☐ 지역인구위기지표 공통기준 작성 연구 보고서 공개('24.3월) - 공통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관계기관(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) 의견수렴('23.하반기)
10.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통계의 개발 필요 사회흐름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선제적으로 생산·구축할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통계청에서는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통계의 개발을 위해 제3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('23~'27년)을 수립('22.12)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○ 향후 5년간 신규통계 개발 29종 등 88종의 통계에 대한 개선·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□ 그 외에도 국가통계 개발사업, 실험적통계 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회흐름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선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· 캥거루족 관련 통계 개발이 필요하며 사회흐름에 따른 새로운 통계를 선제적으로 생산·구축할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□ 인구주택총조사(표본) 결과 분석을 통해 청년 세대의 취업, 경제적 자립, 결혼, 가구구성 및 주거형태 등 사회변화상을 기획보도('23.11.) 할 예정 □ 인구·사회 변화상 반영 및 다양한 정책 수요 부응을 위해 2025 인총 조사항목 신규 발굴 및 개선작업 추진 ○ 조사항목 연구용역 추진('21년, '23년) ○ 기관 및 이용자(2,083개) 대상 신규·개선 항목 설문조사('23.1) ○ 국책연구기관 학회 등 전문가 1차 자문 실시('23.5) ○ 인총 자문단 위촉 및 운영(32명, '23.6.~) <향후 추진계획> □ 시험조사('23.11., '24.5.) 및 시범예행조사('24.11.)를 통한 조사적합성 현장검증 후 국통위 심의를 거쳐 2025 인총 조사항목 확정 예정
· 소비자물가조사에 논쟁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지표 개발 필요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□ 통계청은 공식 소비자물가외에도 다양한 보조지표 작성 공표 중 * 생활물가지수, 신선식품지수, 자가주거비포함지수 등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☐ 올해는 가구특성별 소비 패턴 차이에 따른 물가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특성별 물가지수*를 개발하여 공표함('23.6월) *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 ○ 향후 매년 상반기 중 공표 예정 <향후 추진계획> ☐ 외식물가와 별도로 외식배달비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외식배달비지수 개발 및 공표 예정('23.12월)
11. 통계청 사업의 운영상 개선 · 통계진흥원이 맡은 사업 일부는 수익 계약의 근거를 명확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개경쟁입찰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지적된 사업의 일부*는 '23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하였고, * 통계기반정책평가사업 ○ '24년부터는 기존의 통계사무 위탁사업을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할 예정임
· 통계작성 의무 '불응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태료 외 대안조치를 검토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현재 불응 사업체에 대해 설득,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협조를 요청 중에 있고, 계속 불응하는 사업체에 대한 명단공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, 이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사안임
· 통계청 '홍보 효과 조사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사업수행계획서 등 사업계약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로 등록·관리하여 사업내용의 체계적 관리 강화 ○ 또한, 공공정책평가 및 국민여론조사 경험 보유 능력, 사업수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해 추진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	<향후 추진계획> ☐ 앞으로 계약 담당부서와 사전 검토·협의 병행 등 동 사업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겠음
12. 지방청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 및 통계조사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 필요 · 통계조사의 응답률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 검토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(홍보확대) 통계 응답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 협조 견인을 위해 “국가통계 응답문화 개선 캠페인” 라디오 송출 및 전광판 활용 홍보 확대 ☐ (답례품 지급 개선) 통계 응답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답례품 확대 노력 지속(단가인상, 지급 횟수 확대) ☐ (다양한 조사방식 도입) 응답자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조사방식(인터넷, CATI, 이메일 등)을 도입하여 국민 응답부담 최소화 노력 ☐ (통계조사 모니터링) 시의성 있고,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,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통계 조사자료 사후 검증 실시 ☐ (조사원 교육 및 역량강화) 조사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·확대,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
· 통계청 지방청 인력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반해 표본 수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 통계조사원 한 사람당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청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며, 통계 조사의 응답률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검토할 것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조직 효율화 및 진단·컨설팅에서 지방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직진단 실시 중 <향후 추진계획> ☐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통계조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예정

시정·처리요구사항 (건의사항 포함)	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
13. 현장조사 공무원 관련 · 현장조사 공무원 처우 개선 - 공무원, 공무직은 관련 적용 규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업무(현장조사)를 하다 공상을 당하였을 경우 휴직기간, 임금 지급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개선 방안 마련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완료 ☐ 공무원과 동일한 질병휴직 기간 보장 ○ 공무직(통계조사관) 업무상 질병의 경우, 노조와 협의하여 질병휴직 기간을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2년을 추가 하였음('22.12.28.개정) <향후 추진계획> ☐ 향후에도 공무직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
· '22.7월 43명의 현장조사원 퇴직금 청구 소송 관련 - 기존 인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가능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, 조치	<시정·처리결과> 조치 중 ☐ 1심에서 원고(퇴직 공무원) 승소 판결 ○ 퇴직금 추가 지급(약 19억)에 따른 국가 예산 집행의 신중성, 상급 재판부의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항소 <향후 추진계획> ☐ 재판 일정 등에 따라 후속조치 예정